

주택연금 가입이 고령층 소비 진작에 미치는 영향

2015. 08

목 차

I. 한국 고령층 소비성향의 퍼즐(puzzle)	1
II. 한국 고령층 소비성향 변화에 대한 가설	5
III. 주택연금 및 기타소득별 한계소비성향 추정	11
IV. 결론 및 시사점	18



- 작성자: 고제현 연구위원 (051-663-8174 / thehp@hf.go.kr)
- 본고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 의견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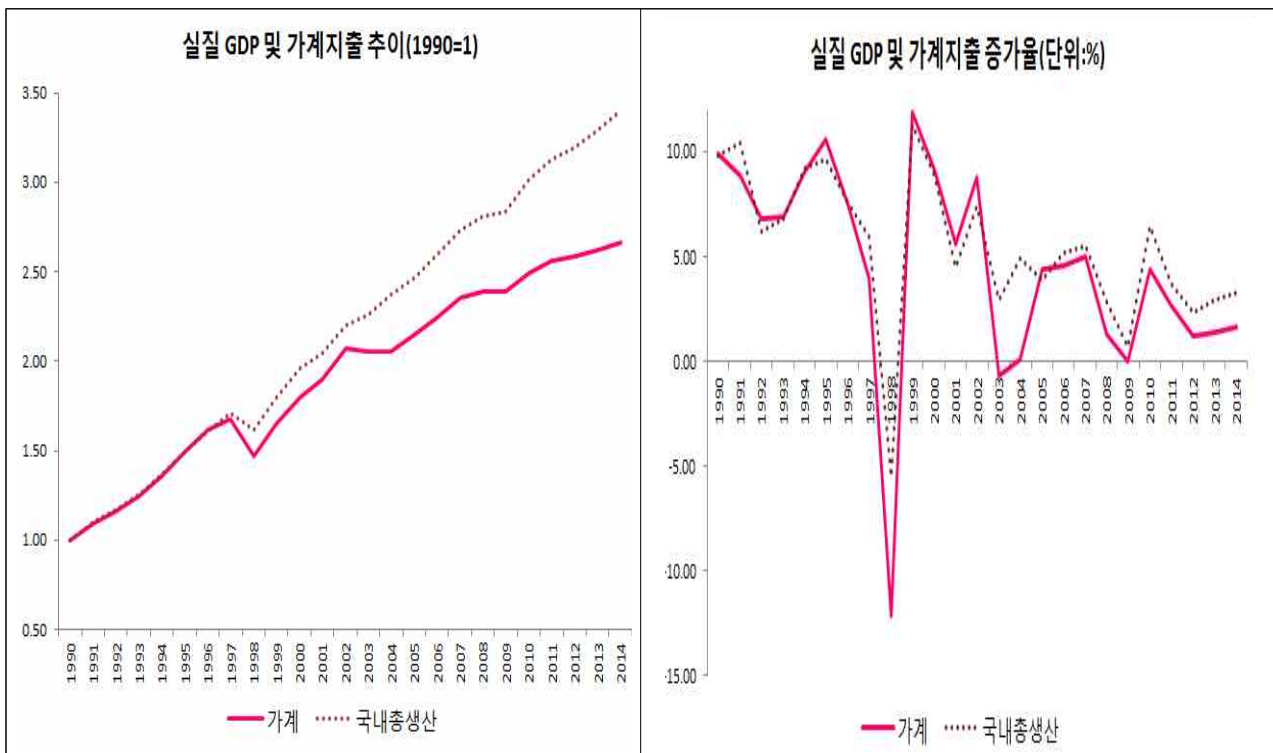
- 최근 고령층 중심의 소비성향 둔화는 고령층 소득구조가 불확실성에 취약한 것에 기인함.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원천에 따른 한계소비성향의 차이를 추정하여 이를 확인함.
-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안정성으로 인하여 한계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남.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일본형 장기 침체를 경계하는 가운데 소비침체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임. 최근 한국 소비침체는 소비성향이 둔화되며 진행되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 특히 인구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가 두드러짐.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저축률을 낮추지만 기대여명의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의 증가가 예비적 동기의 저축을 증가시켜 저축률이 증가하고 소비성향이 감소함.
-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 고령층 소득의 주요 원천이 자영업 소득 혹은 비정규직 근로소득이 됨에 따라 불확실성에 취약해 소비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짐.
-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원천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다른 소득 원천에 비하여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남. 이는 종신 지급되는 월지급금이 고령층에게 안정적 소득원으로 인지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 고령층에 비하여 소비 지출에 있어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안정적 소득원의 필요성이 큰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함.

- 한국 고령층 소비 둔화는 현재 고령층 소득 구조를 고려할 때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는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소비 침체가 장기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층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어 소비심리가 개선되어야 함. 현 고령층 소득 구조에서 고령층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현금흐름화가 중요함.
-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 중 82.4%가 부동산으로 그 중 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와 종신까지 월지급금을 지급함. 주거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주택 연금을 고령층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1. 한국 가계 소비 부진과 가계 평균소비성향의 감소

- 2000년대 이후 가계소비 증가율은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하고 있음.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계소비 증가율 둔화가 심화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국민계정

- 가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미시적으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2000년대 중반이후 가계 평균소비성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고령층의 평균 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감소함.

	전체평균	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평균소비성향 변화 (‘03년 대비 ‘14년)	5%p▽	2.8%p▽	3.3%p▽	5.7%p▽	11.5%p▽

자료: 가계동향조사(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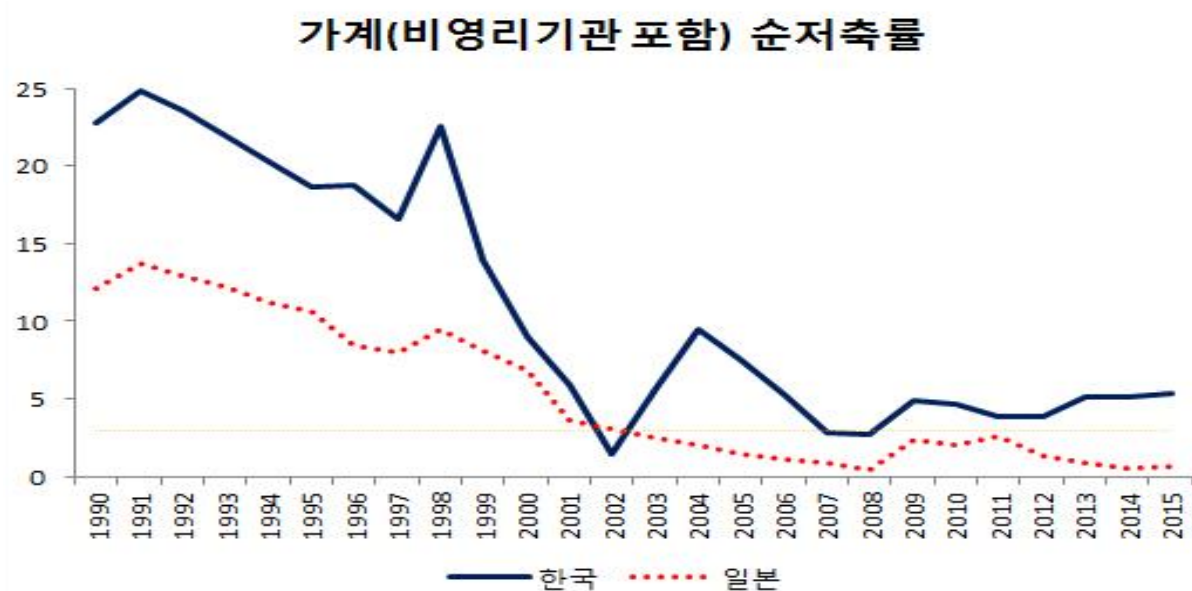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통계청)

2. 인구고령화와 소비성향: 최근 한국 고령층 소비성향의 특이점

- 일반적으로 인구 고령화는 가계 저축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됨.
 - 생애주기(life-cycle) 가설에 따를 때 고령층의 평균 소비성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음.
 - 생애주기가설에 따를 때 연령별 소비성향은 U형태를 띤다.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기 저축 여력이 없어 소비성향이 높고, 중장년기 소득이 증가하며 저축을 늘려 소비성향이 감소했다가 노년이 되어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성향이 증가함.
 - 상대적 소득가설에 따를 때 저소득층은 일반적으로 고소득층보다 평균 소비성향이 높음.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소득 수준이 낮고 이에 따를 때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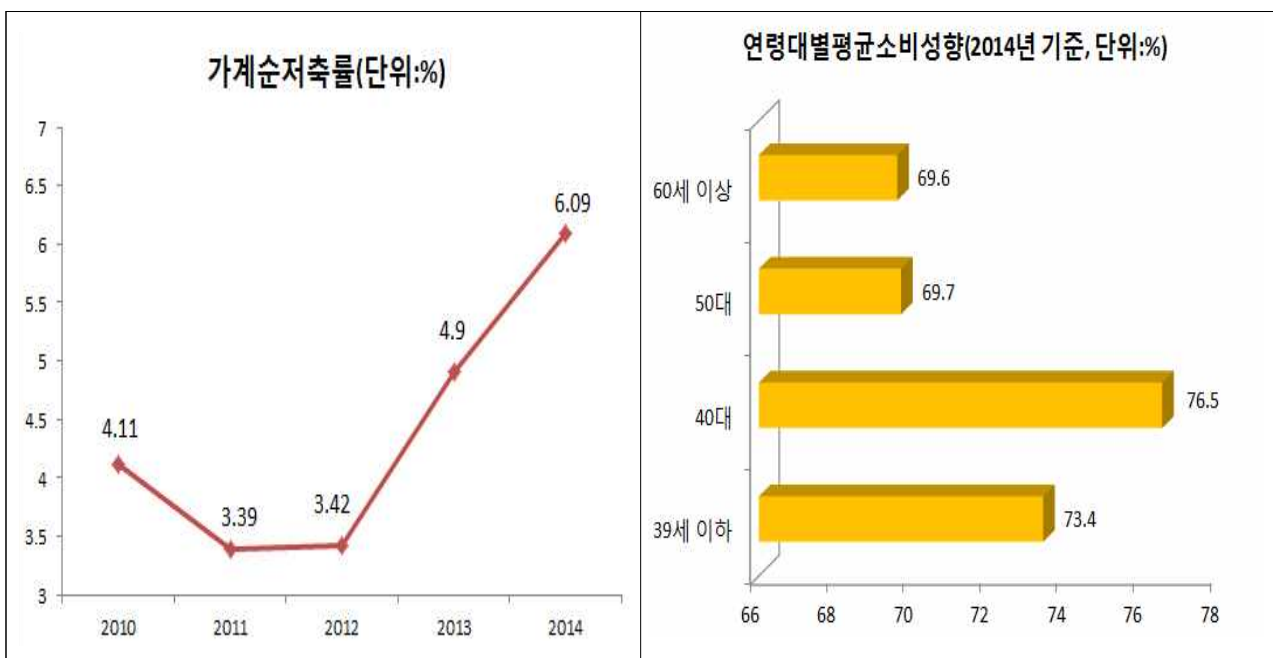
- 인구고령화가 심화된 일본과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모두 90년대 이후 가계순저축률이 하락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급격히 저축률이 하락해 왔음.



자료: 가계동향조사(통계청)

(주)순가계저축률=(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연금기금에 대한 가계의 순지분 증감)/가계처분가능소득

- 그러나 최근 국민계정의 가계순저축률이 상승하고 있으며,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가장 낮은 현상이 나타남.



자료: 가계순저축률(한국은행), 연령대별 평균소비성향(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한국은 OECD 국가 중 다른 연령대비 고령층 인구의 상대소득이 가장 적은 국가임에도 최근 고령인구의 평균소비성향 감소가 심화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전체 인구 소득 대비 66-75세 인구의 소득 수준이 평균 90.1%인데 반하여 한국은 동 비율이 62.4% 수준임.

전체 인구 소득대비 66-75세 인구의 소득 수준 (2000년대 후반기준, 단위%)							
OECD 평균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90.1	62.4	102.4	89.0	89.6	103.4	86.0	94.8

자료: Pension at a glance2013(OECD)

- 또한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으며 이는 전체 인구 빈곤율 수준에 비추어서도 현격히 높은 수준임.



자료: Pension at a glance 2013(OECD)

- 장기적으로 가계저축의 증가는 자본의 축적에 따른 투자확대로 이어질 때 잠재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임. 단 미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가계저축의 증가는 소비 위축 및 투자 비활성화에 따라 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1. 한국 고령층 가계 소비성향 하락에 대한 가설

- 최근 한국 가계 소비성향 하락 요인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¹⁾ 인구고령화, 기대여명의 증가, 소득분배의 악화 등 요인에 주목하며 다양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음.
- 다수 연구의 공통된 가설은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예비적 동기의 저축(precautionary saving)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불확실성 증가 요인으로 기대여명 증가²⁾, 경기 침체에 따른 소득 리스크(income risk)³⁾ 및 고용 리스크(employment risk)⁴⁾ 증가 등이 강조되고 있음.
- (기대여명의 증가) 특히 고령층에서 가계 소비성향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기대여명 증가에 주목함.
 - 평균 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예상하지 못한 기대수명 증가는 소비와 저축 결정에 영향을 미침. 특히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고령층은 예상치 못한 기대수명 증가에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게 됨.
 - 평균 기대수명이 2000년 76세에서 2013년 평균 82세로 증가함. 젊은 소비자들은 예상치 못하게 기대수명이 증가하여도 재원을 확보할 여력이 있는 반면, 고령층은 은퇴 후 재원 확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없는 까닭에 소비를 더 큰 폭으로 줄이게 됨.

1) 권규호·오지윤(2014),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나승호·정천수·임준혁(2013), “구조적 소비계약 요인 및 정책과제”, 배병호·손민규·정원석(2014) “최근 소비부진과 가계의 시간선호 변화”

2) 김석기(2014) “수명증가가 연령별 평균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김석기, 임진(2015.2) “평균 수명 증가가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

3) Keiko Murata(2003) “Precautionary Savings and Income Uncertainty: Evidence from Japanese Micro Data”

4) Takero DOI(2004) “precautionary saving and employment risk in the 1990s”. Marcus Klem(2012) “Job security Perceptins and the Saving behavior of German households”

연령대별 기대 여명									
	0세	10세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80세
2000	76.02	66.70	56.90	47.25	37.78	28.79	20.43	13.05	7.44
2005	78.63	69.18	59.33	49.62	40.04	30.86	22.21	14.39	8.14
2013	81.94	72.28	62.39	52.64	43.01	33.67	24.76	16.43	9.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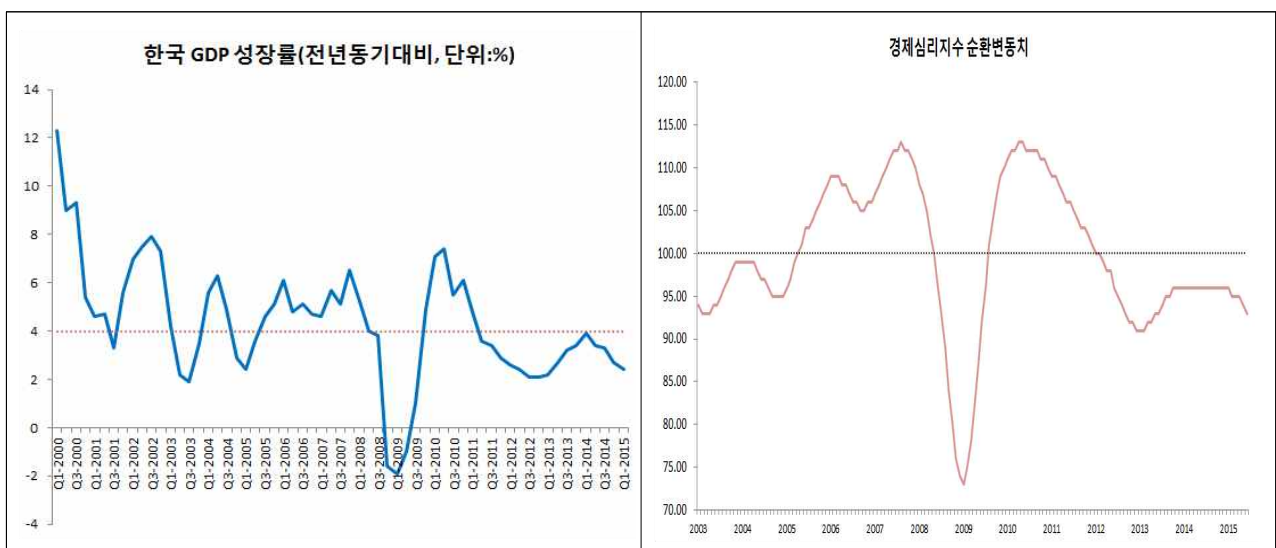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경기침체)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침체 현상은 주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되어 왔음.

- 일본의 경우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향후 소득 및 고용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개인이 미래 소비를 위해 저축을 증가시킴. 특히 일본은 연금이 충분한 노후보장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하에 저축 유인이 커 고령층 중심으로 저축이 증가하며 소비성향이 감소함.⁵⁾

□ 예상치 못한 기대여명 증가는 고령층의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임. 하지만 기대여명의 증가가 최근 가속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012년 이후 두드러진 가계 평균소비성향의 감소는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때문인 것으로 보여짐.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4% 미만의 성장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상황에 대한 민간 심리가 계속 위축되어 있는 상태임.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를 보면 2012년 이후 기준치(100)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음.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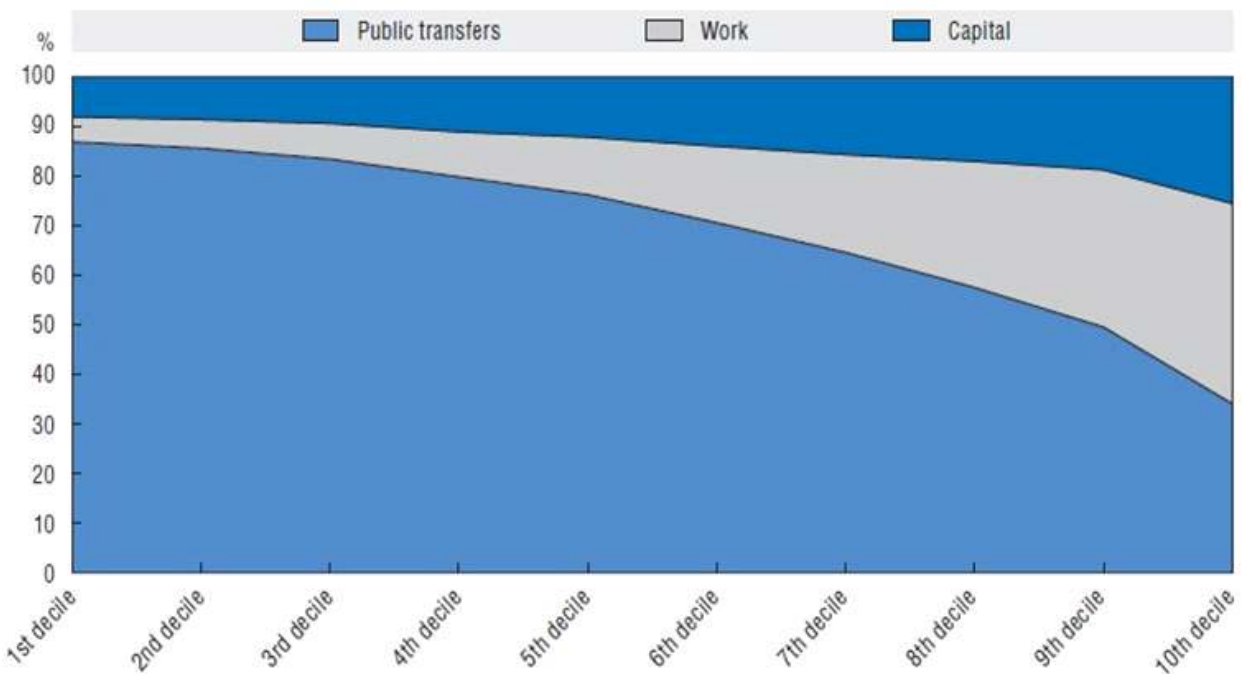
5) 박종규(2007)“ 일본의 장기침체와 회생과정: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2. 한국 고령층 소득 구조의 특징

-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제약이 왜 고령층에게 크게 나타났는지 한국 고령층 소득구조의 특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은 공적연금가입자가 적거나 연금 대체율, 건강 보험제도의 보장정도(coverage)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
 -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연금 대체율이 OECD국가 중 낮은 국가에 속하며 2013년 기준 OECD국가 평균 연금대체율이 64.2%인데 반하여 한국 연금 대체율은 45.2%, 일본은 40.8%임.
- OECD 국가들 고령층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구성에 있어 정부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고소득층일수록 근로 및 자본 소득의 비중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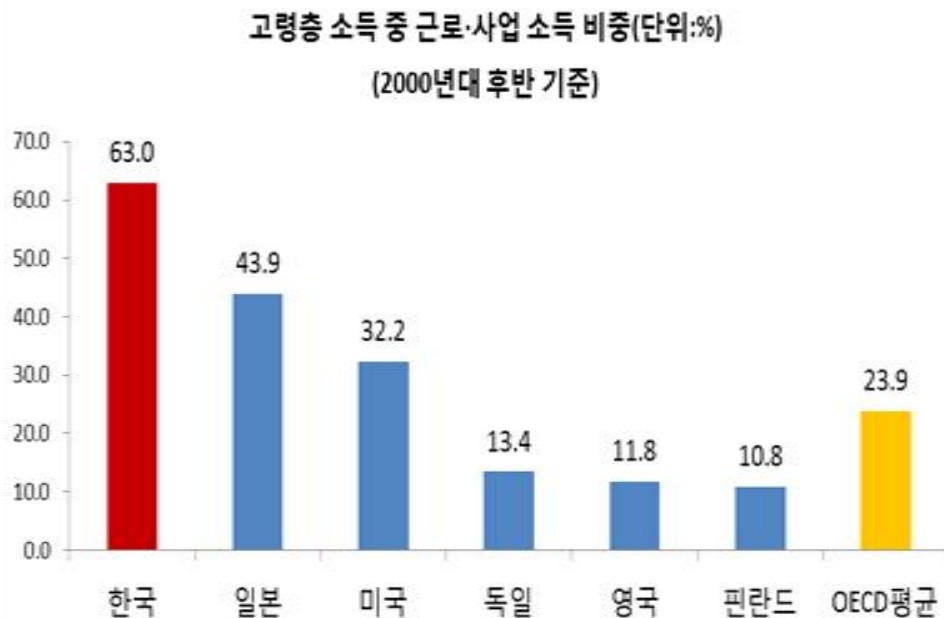
※ 근로(work)소득은 근로 및 사업소득을 포함함

<그림>고령층 인구(65세 이상)의 소득 분위별 소득구성(2000년대 후반기준)



자료: Pension at a glance 2013(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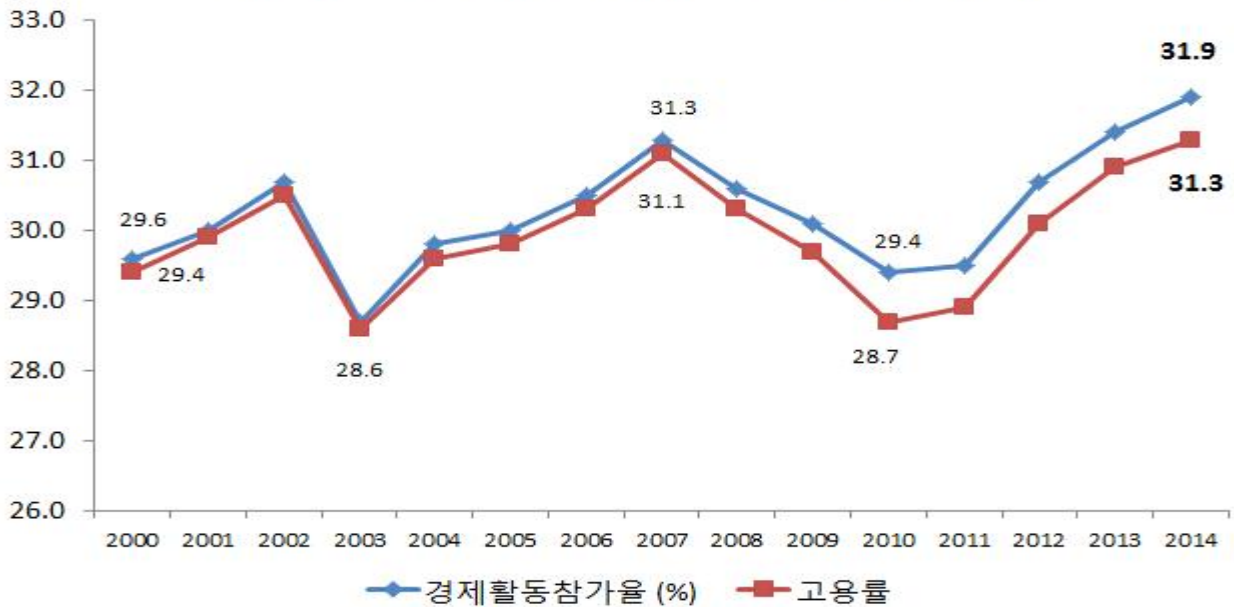
- 한국 고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소득의 상대적 수준이 낮고 빈곤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의 구성이 근로·사업소득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OECD 국가들 소득구성을 비교하여 봤을 때 2000년대 후반 기준 평균 평균 근로·사업소득 비중은 23.9%인데 반하여 한국은 63%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일본 또한 43.9%로 근로·사업소득 비중이 높음.



자료: Pension at a glance 2013(OECD)

- 한국 고령층은 노후 소득으로 정부의 보조나 공적 연금 내지 사적 연금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에 비하여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및 고용률이 높음.
-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은 2014년 기준 31.9%, 고용률은 31.3%로 2010년을 저점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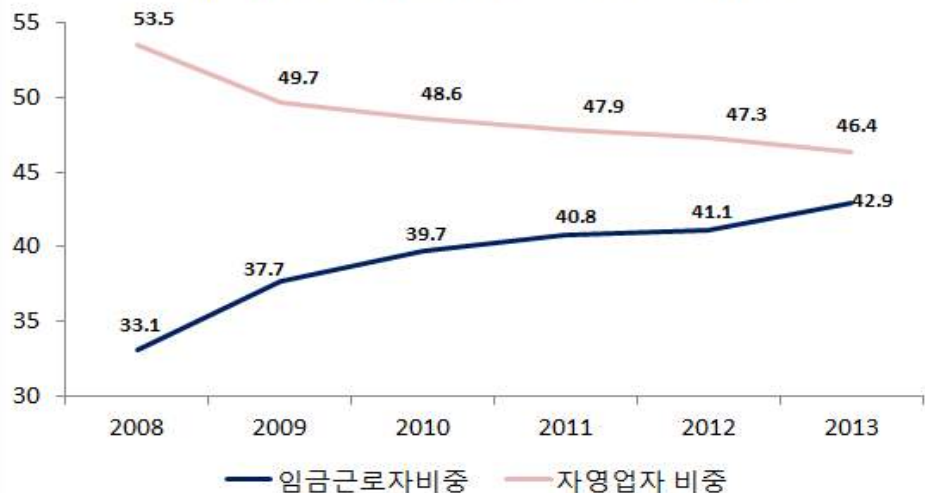
6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단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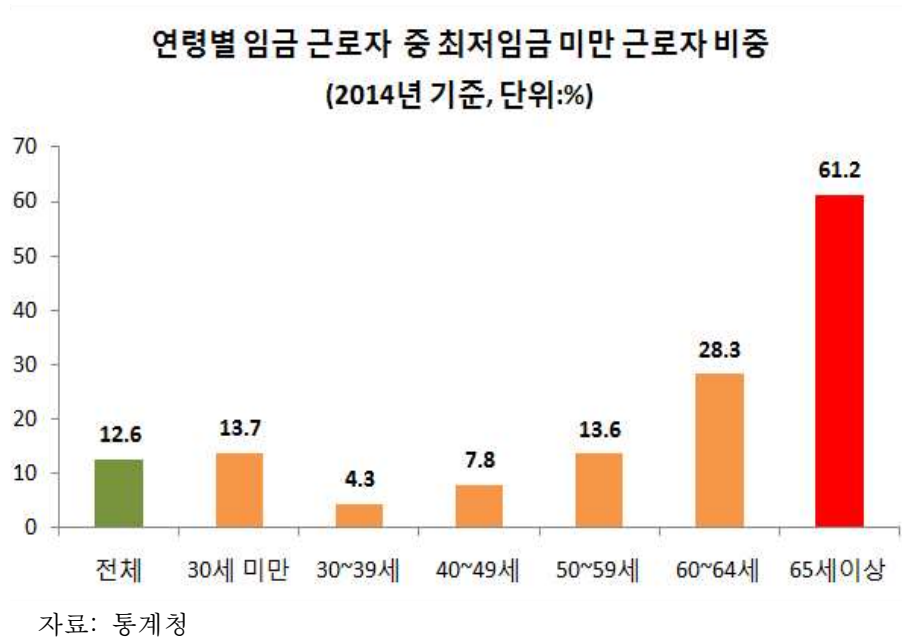
- 한국 65세 이상 고령인구 취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최근 들어 비정규직 임금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임금근로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한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일자리가 다수를 차지함.
- 2013년 기준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42.9%,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46.4%임.

65세 이상 노인 취업자의 종사상 비중(단위:%)



자료: 통계청

-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고령층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 미만의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현격히 높음.



1. 연구동기

- ☐ 최근 한국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에 대한 가설은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예비적동기의 저축 유인이 차이가 나고 이에 소비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임.
- ☐ 따라서 고령층 소득원천별로 소비성향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2012년에서 2014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원천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함.
- ☐ 주택연금은 2007년 도입되어 2015년 6월 현재 약 2만5,699명이 가입하고 있는 공적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제도로써 주택연금 이용자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연금방식으로 월지급금을 받음.
 - 기존 민간은행들의 역모기지 상품이 대출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종신토록 거주하며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 받음.
- ☐ 주택연금의 또 다른 특징은 대출한도의 50% 이상을 반드시 월지급금으로 수령하도록 정하고 있어 고령층 생활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임.
 - 미국의 공적 보증 역모기지는 대출한도의 100%, 홍콩의 공적 보증 역모기지는 대출한도의 90%까지 일시 대출이 가능함.
- ☐ 주택연금 가입을 통해 종신까지 매월 현금소득이 발생하는 주택연금 이용자는 경제활동 지속 여부와 소비 패턴에 있어서 비가입자와 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상할 수 있음.

2. 자료 및 자료특성

- 2012년에서 2014년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함.
동기간 일반노년층 표본은 7000가구, 주택연금이용자는 1800가구임.
-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의 잠재 고객인 일반노년층과 현재 고객인 주택연금이용자를 대상으로 2008년 처음 시행되어 2012년 이후 매년 시행되는 조사
- 만 60~84세 일반노년층과 주택연금이용자로 구분되며, 일반 노년층 표본은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를 근거로 지역·연령별 무작위 추출함. 주택연금이용자는 보증서 발급일 기준 조사년도 전전년 7월에서 전전년 6월 이내 이용자 중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가구를 전수 조사함.

〈그림〉 주택연금 수요실태 조사 개요

	일반노년층	주택연금이용자
조사대상	- 만 60~84세 - 주택보유자 혹은 그 배우자	보증서 발급일 기준, 조사년도 전전년 7월~전전년 6월 이내 이용자
표본 추출방법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지역/연령별 비율 할당	전수접촉
표본 수	'12~'13년 매년 총 2,000가구 '14년 총 3,000 가구	총 600가구
조사 지역	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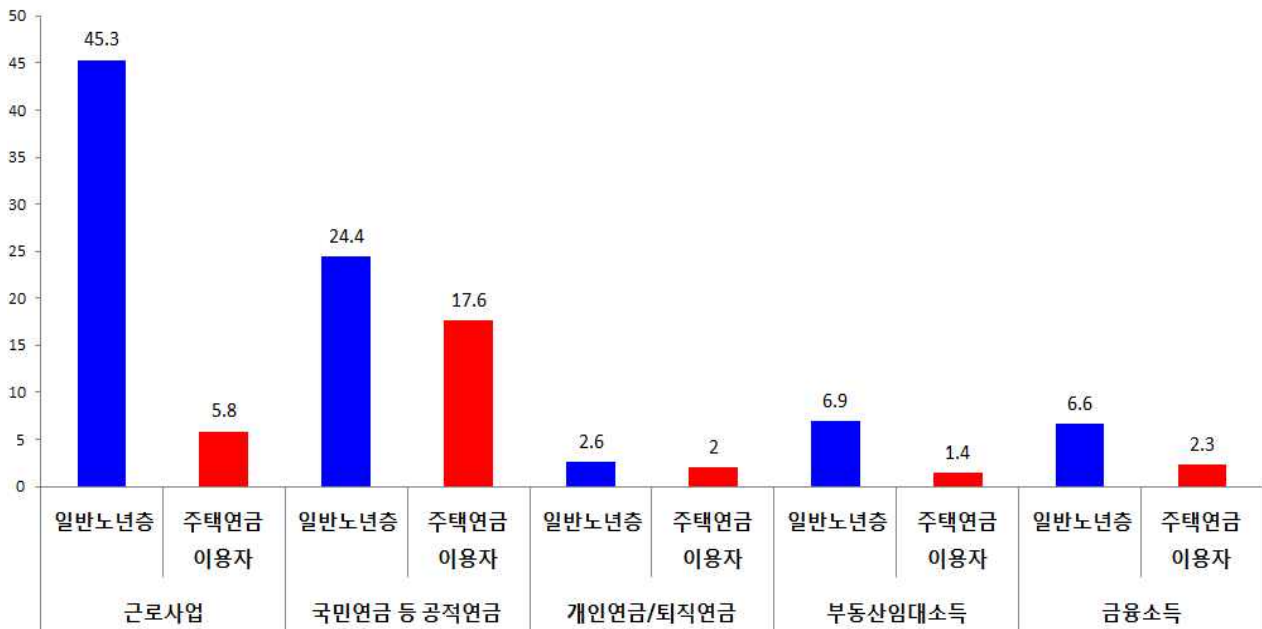
- 인구 주택 총조사를 근거로 표본 추출한 일반 노년층과 주택연금 이용자의 표본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연령) 일반 노년층의 연령대별 구성비와 비교할 때 주택연금 이용자는 은퇴전후 60~69세 비중이 작음.
- (소득편차) 일반 노년층에 비하여 주택연금 이용자는 월평균소득의 편차가 작음.
- (경제활동 여부) 일반 노년층에 비하여 주택연금이용자 가구의 경제 활동 비율이 낮음.

		일반 노년층 (7000명)		주택연금 이용자 (1800명)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연령	만 60~64세	30.2%	2114	7.1%	127
	만 65~69세	25.3%	1772	18.4%	331
	만 70~74세	22.0%	1540	33.1%	595
	만 75~79세	15.1%	1058	29.0%	522
	만 80~84세	7.4%	516	12.5%	225
월평균 소득	50만원 이하	10.2%	713	4.8%	8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23.5%	1648	23.1%	415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	18.6%	1300	25.0%	450
	1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19.0%	1333	20.7%	372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18.4%	1291	19.5%	351
	300만원 초과	10.2%	715	7.0%	126
경제 활동 여부	본인/배우자 한명 이상	60.8%	4256	10.8%	195
	없음	39.2%	2744	89.2%	1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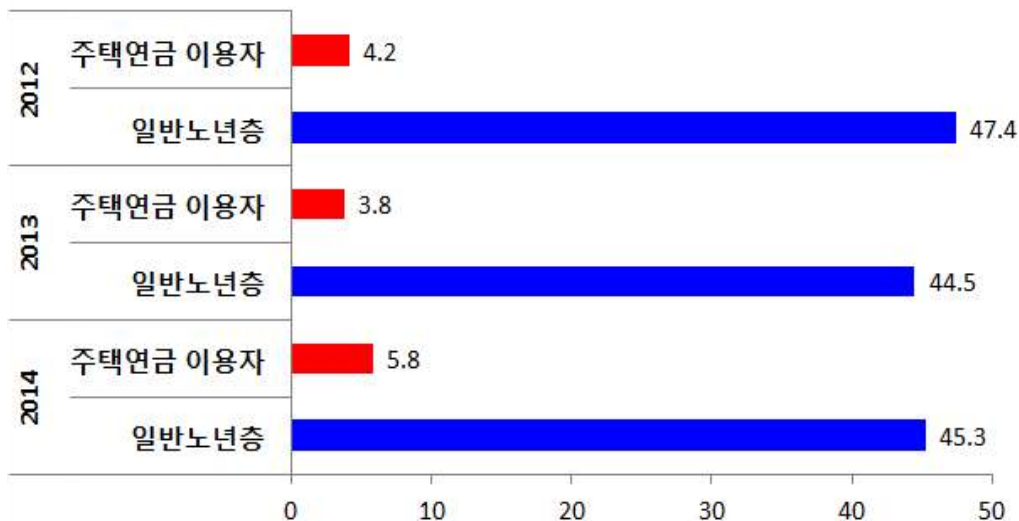
- ☐ (소득의 구성)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는 소득을 7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범주는 근로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인연금/퇴직연금, 부동산임대 소득, 금융소득, 주택연금, 자녀/친지 도움으로 구분됨.
 - 소득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 노년층의 근로소득이 주택연금가입 노년층의 경우 주택연금 월지급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보여짐.

일반 노년층과 주택연금가입자의 소득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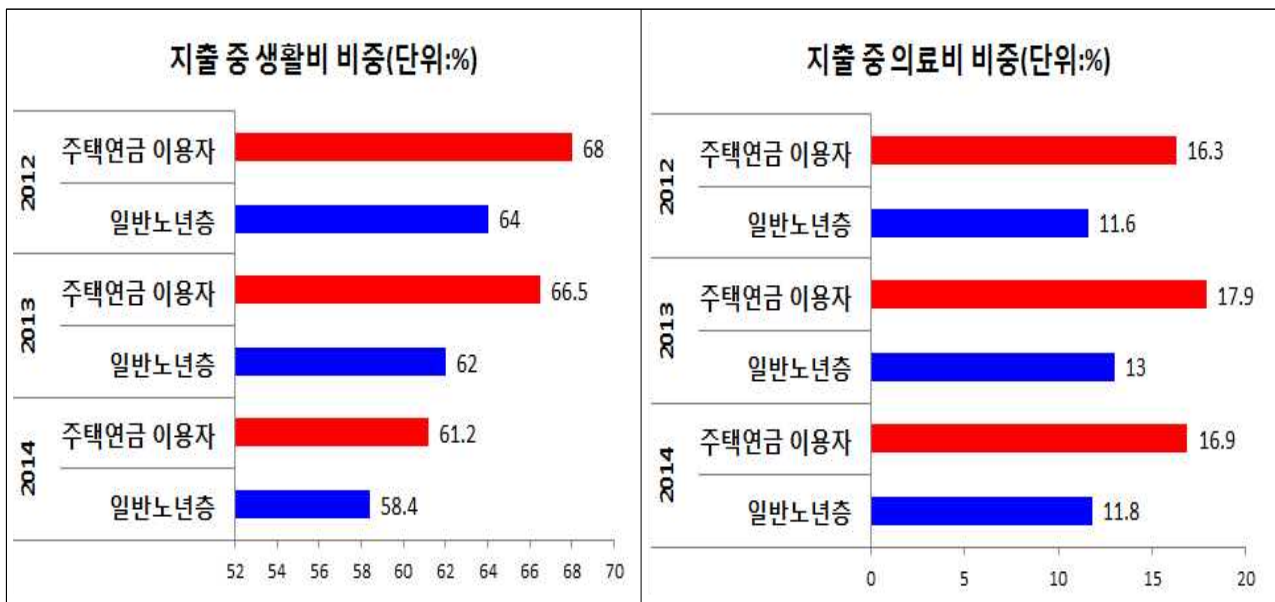


- 근로소득이 작은 가구들이 주택연금에 가입 또는 주택연금 이용 노년층이 일반 노년층 가구에 비하여 근로소득의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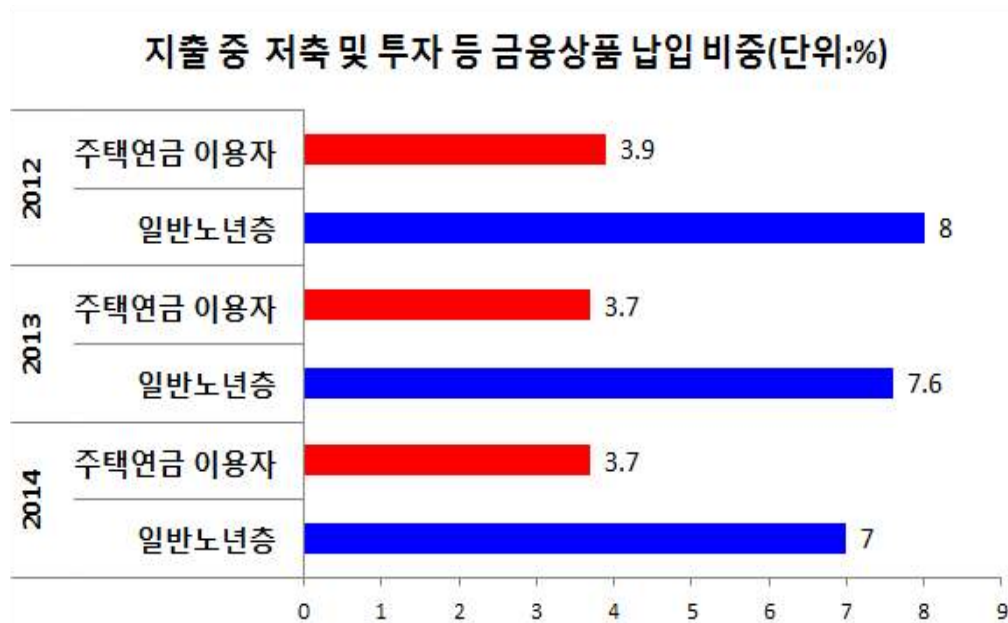
수입 중 근로/사업소득 비중(단위:%)



- (월평균 지출의 구성)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는 일반 노년층과 주택연금 이용자에게 지출을 7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조사함.
- 범주는 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문화생활 및 여행비,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상품 납입, 가족 부양비, 대출 상환 비용으로 구분됨.
 - 지출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 노년층 가구에 비하여 주택연금 이용자는 생활비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음. 고령층 의료비 지출은 고령층 질병의 특성상 일회적이기 보다는 지속적 지출임. 따라서 안정적 소득원 확보 필요성이 큰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있다고 보여짐.



- 또한 일반 노년층 가구는 주택연금 이용자에 비해 지출 중 저축 및 투자 등 금융상품 납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3.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 2012년~2014년 주택연금수요실태조사를 통하여 소득원천을 주택연금 월지급액, 근로·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소득별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함. 추정식은 아래와 같음.

$$C_{i,t} = \alpha_0 + \alpha_i' Z_i + \beta_1 Y_{RMi} + \beta_2 Y_{Li} + \beta_3 Y_{Pi} + \beta_4 Y_{Ei} + \gamma_1 D_{2012} + \gamma_2 D_{2013} + \epsilon_{i,t}$$

$C_{i,t}$: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t 년도 i 가구의 소비지출

$Z_{i,t}$: i 가구의 특성(교육수준, 나이, 성별, 동거가족수)

Y_{RMi} : 주택연금 월지급액, Y_{Li} : 근로·사업소득, Y_{Pi} : 연금소득, Y_{Ei} : 기타소득

D_{2012} : 조사년도가 2012년 일때 1, D_{2013} : 조사년도가 2013년 일때 1

$\epsilon_{i,t}$: 오차항

- (추정결과) 추정 결과 주택연금 월지급액에 대한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근로·사업소득의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낮게 추정됨.

- 주택연금 월지급금에 대한 한계소비성향 계수는 0.80인데 반하여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소비성향계수는 0.68임.
 - 주택연금 가입으로 소득이 100만원 지급될 경우 개인 소비는 80만원 증가하는 반면, 근로나 사업소득이 100만원 지급될 경우 개인소비는 68만원 증가함을 의미함.
- 동일한 소득일 경우에 있어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적게 소비하는 반면,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됨.

	추정계수	t값	P> t
주택연금 월지급금	0.80	100.13	0.000
근로·사업소득	0.68	172.24	0.000
연금소득	0.72	124.13	0.000
기타소득	0.75	135.30	0.000
연령	-0.34	-5.45	0.000
교육수준	4.46	7.96	0.000
성별	-4.12	-5.67	0.000
부양가족수	1.14	3.16	0.002
상수항	50.68	9.84	0.000
$\overline{R^2}$	0.89		

- 소득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소비성향이 감소한다는 가정은 종신까지 지급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소득인 주택연금 월지급액의 한계소비성향이 높게 추정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주택연금이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주기적 소득이 없는 고령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도입 취지에 부합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국 고령 가구의 자산 구성이 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대다수의 고령가구가 안정적 소득원이 부족한 상태임에 비추어 주택연금은 자산을 유동화 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함.

- 인구 구조변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령층 소득의 불안정성에 기인한 소비 둔화는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수 있음.
 - 일본 장기침체기 소비 둔화의 주요요인으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공적 연금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고령층 소비심리 악화가 논의됨.
- 한국은 OECD 국가 중 고령층의 빈곤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소득 구조는 근로·사업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음. 고령층 소득의 주요 원천이 자영업 소득이나, 비정규직 근로소득이 됨에 따라 불확실성에 취약해 소비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소득원천별로 한계소비성향을 추정한 결과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다른 소득 원천에 비하여 소비 성향이 높게 나타남. 이는 종신 지급되는 월지급금이 고령층에게 안정적 소득원으로 인지되기 때문임.
 - 주택연금 가입자는 일반고령층에 비하여 소비 지출에 있어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특성상 지출이 지속성을 갖는 것을 고려할 때 안정적 소득원의 필요성이 큰 고령층이 주택연금을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 가능함.
- 우리나라 소비 침체가 장기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층 소득 안정성이 제고되어 소비심리가 개선되어야 함. 현 고령층 소득 구조에서 고령층 소득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현금흐름화가 중요함.
-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중 82.4%가 부동산으로 그 중 주택의 비중이 매우 높음.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거주와 종신까지 월지급금을 지급함. 주거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고령층이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